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

의안 번호	547
----------	-----

발의년월일 : 2009년 9월 17일

발 의 자 : 오영세·박수범·곽영교 의원 외 5인

1. 주 문

150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몰락을 가져 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의 중소유통상권 보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자 함.

2. 제안이유

- 가. 그 동안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지역상권을 빼앗기면서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고사상태에 처해 있으며, 나아가 서민경제의 몰락과 심각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나. 이에 150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 1)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 제한 등에 관한 합목적 국내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에 수정양허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국내 중소유통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 2) 국회와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조속히 심사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건의함.
 - 3) 정부는 지역 중소유통상권 보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건의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후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실상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독점해 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의 상권은 경쟁력을 잃고,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다 못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그나마 그 동안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상권을 빼앗기면서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지역의 골목 영세소상인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풍전등화 신세로 전락되면서, 나락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취급하는 상품이 동네 골목슈퍼와 전통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완전히 동일한 상품들이어서 대형유통업체보다 골목 영세상인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인해 대기업이 갖는 브랜드 효과, 가격 경쟁력으로 주변 중소상권을 흡수하는 빨대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 도소매 유통망 역시 완전히 대기업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지역 중소유통업의 몰락과 함께 더 나아가 풀뿌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뒤엎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위배되어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일삼으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대전광역시 150만 시민 모두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이 아무런 규제 없이 동네 골목슈퍼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당연히 정부는 풀뿌리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150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대규모유통업체를 포함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활동 제한 등에 관해 합목적인 국내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에 수정양허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국내 중소유통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들을 조속히 심사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셋째, 정부는 지역의 중소유통상권 보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09. 9. 18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지식경제부장관
4. 국무총리실장
5. 중소기업청장
6. 국회의장
7.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8. 한나라당 대표
9. 민주당 대표
10. 자유선진당 대표
11. 민주노동당 대표
12. 창조한국당 대표